

“흡연 갈등 주범 베란다·화장실 왜 빠졌나”

내달 아파트 금연구역 확대...최다 민원 불구 대상서 제외

실효성 의문 속 공무원들 “공동주택 단속 한계” 호소도

“베란다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가 가장 골치 아픈데 왜 빼는 거죠.”(광주 북구 한 주민)

“아파트에 단속 나가서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광주 한 자치구 직원)

다음달부터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가 이웃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층간 흡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 놓은 방안이다. 하지만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많은 베란다와 화장실 등이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주민들은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벌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가 주로 베란다와 화장실에서 일어난다고 있지만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는 모두 1025건이고 이 가운데 53.7%(550건)가 베란다, 화장실 등 집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어 계단과 복도 등 공용부(31.9%·327건), 단지 내 놀이터 등(12.6%·129건) 순이었다.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베란다에서 올라가거나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타고 퍼지는 층간 간접흡연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계도와 단속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일선 자치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우려를 나타

내고 있다. 공공시설과 음식점, PC방과 달리 아파트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속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아파트 단지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되레 집안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늘어 층간 흡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현재 음식점과 PC방 등도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힘든 상황에서 공동주택 단속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승민(36)씨는 “다른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위한 흡연공간 없이 무조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통학버스 안전벨·경광등 달아 사고 예방

광주교육청 대책 발표...예산 분담 논의 안돼 의욕만 앞서

광주교육청이 꺾통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 차량 내부에 안전벨을 설치하고 운행 종료 후 학생 움직임을 감지하는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관련 대책에 들어갈 예산 분담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의는 발표’만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당과 정책협의회에서 ‘통학차량 안전사고 현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3월 개학때를 맞춰 통학버스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고 유치원별로 안전사고 예방 담당자를 지정, 담당자별로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차량 내부의 동승 보호자 좌석과 뒷좌석에 위기상황을 알리기 위한 안전벨을 설치하고 동작 감지 센서를 달아 운행

종료 후 차량 내에서 학생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클락슨이 울리고 경광등이 깜박이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그러나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뒤 6일 만에 내놓은 대책 입도에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예산 마련 계획이나 분담 여부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돼 의욕만 앞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담 인력 4명이 300개가 넘는 통학 버스 및 재난 사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실효성 있는 대책도 요구되는 형편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통학차량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섬진강 물놀이 고교생

1명 사망·1명 실종

섬진강 하류에서 물놀이를 하던 고등학교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9구조대는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다.

4일 오후 2시6분께 광양시 태인동 수변공원 인근 섬진강 하류에서 이모·송모(이상 17)군 등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들은 광양지역 같은 고등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강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 10명 가운데 6명이 수영을 하다가 4명은 빠져나왔지만 이군 등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35분께 바다에 빠진 이군을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 인원 30여명을 동원해 실종된 송군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광양=김경민기자 kkw@



폐형광등 수거 정리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4일 건국동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에서 수거해온 폐형광등을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골동품만 골라 턴 이유가 기가막혀

절도범 “내 갤러리 만들고 싶어서...”

순천경찰, 50대 구속

“내 갤러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모(57)씨가 골동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마땅한 직업이 없던 이씨는 소일거리로 고물을 수집하면서 버려지는 미술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림, 목공예품 등을 모아 집에 진열하는 게 이씨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러기를 1년. 이씨에게는 자신의 골동품과 미술품을 전시할 갤러리를 만들겠다는 꿈이 생겼다. 꿈은 곧장 욕심으로 변했다.

마땅한 돈이 없던 이씨는 보안장치가 허술한 집에 들어가 병풍, 목공예품, 골동품 등을 훔치기 시작했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전거와 손수레를 이용해 고물 수거상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다른 보석이나 현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훔친 물건을 거실과 다락방 등에 진열장을 만들어 보관하면서 큰 행복을 느꼈다.

이씨의 범행은 끈질긴 추적에 나선 경찰에 탐미를 잡혔다.

순천경찰은 4일 상습적으로 주택에서 골동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순천시내 구도심 주택가를 돌며 20차례에 걸쳐 95점(3100만원 상당)의 골동품 등을 훔친 혐의다.

이씨의 집을 방문했던 경찰은 “집에 300여점에 달하는 조각, 공예품 등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아직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물건도 있는 점으로 미뤄 이씨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주·전남 식중독 사고 매년 증가...갈수록 대형·집단화

4년간 환자 1661명 달해

광주·전남지역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식 또는 주문 도시락 등 단체급식 증가 추세에 따라 식중독 사고가 점차 대형화하고 폭염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음식물 위생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모두 98건(환자 수 1661명)

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17건(334명) ▲2013년 21건(531명) ▲2014년 28건(440명) ▲지난해 32건(356명) 등이다.

특히 월별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무더운 여름철인 7월~8월에 식중독 사고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전과는 달리 겨울철에도 끊이지 않는 등 연중발생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월별로는 7월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8월(14건)·6월(12건)·5월과 9월(각 9건)·11월(8건)·1월(7건) 등의 순이다. 또 단체급식이 보편화되면서 식중독 사

고가 대형화·집단화 추세를 보이는 등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3월 광주에선 1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지만 환자 수는 44명으로 집단화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11월 전남에선 2건의 식중독 사고에 5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식중독 사고가 주로 발생한 장소는 학교급식 또는 학교 외 집단급식소, 음식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중독의 주된 원인 식품은 육류 및 가공품(대지고기), 어패류 및 가공품(생선회, 패류), 복합조리식품(김밥, 도시락 등) 등이었으며 조리사, 조리사

보전당국은 식중독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익혀 먹는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급식소와 학교,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식품원료 구입에서부터 보관, 조리 등에 이르기까지 식중독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와 위생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될 경우 식중독 지수가 경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만큼 조리 후 4시간 이내에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지하철 부정승차 크고 다친다...운임 30배 과태료



○...광주도시철도공사 22일부터 승차권 없이 타거나 다른 사람의 우대권이나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을 적발하기 위해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

○...4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207건이던 부정승차 건수는 올해 들어 7월말 현재 147건에 달하는 등 연말까지 200건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우

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

○...철도공사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부정승차 단속 안내 홍보물 설치, 시민 캠페인, 열차 내 안내방송 등 시민 의식 계도 활동과 함께 취약시간대 게이트 집중 근무로 부정승차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단속되면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토지, 6000평

투자 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 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